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

정요근(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 1. 머리말
- 2. 정치 세력과 주류 사상의 연속성
- 3. 통치 체제와 제도 운영의 연속성
- 4. 대외 관계 추진과 보편문화 수용의 연속성
- 5. 맺음말

1. 머리말

단일왕조의 존속 기간이 500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길었다는 점은 전근대 시기 한국사 전개에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에 따라 한국사학계에서는 왕조의 교체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역사인식이 일찍부터 보편화되었다. 1392년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의 왕조 교체 역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1368년에 원(元)과 명(明)의 왕조 교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14세기 후반이 큰 변동의 시기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945년 일제(日帝)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 하에서 확산되었던 이른바 식민사학의 ‘정체성론(停滯性論)’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의 발전적 성격을 강조하는 역사 인식이 유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왕조의 교체는 한국사의 발전적 성취를 증명하는 하나의 계기로 이해되었다. 발전론적 한국사 인식에서는, 조선왕조 건국의 주도 세력으로서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신진사대부는 국가 재정의 확충, 중앙 집권체제의 정비, 불교계의 폐단 제거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혁 세력이자, 권문세족(權門世族)의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난맥상을 극복한 진보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개창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신진사대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국사 전개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의 계기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조선왕조 개창을 주도했던 이른바 ‘급진파 사대부’는 신진사대부의 이념적 기반인 주자성리학에서 혁명적 요소를 추출하여 실천에 옮긴 역사 발전의 선도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고려 시대를 이해하는 기본 자료로서 조선 초기에 편찬된 정사(正史)인 『고려사(高麗史)』가 조선 개창 세력의 시각에서 서술되었다는 점 역시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를 분절적으로 보고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근래 한국사 학계에서는 발전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발표문은 1392년의 고려-조선 왕조 교체보다는 13세기 후반 고려의 원(元) 복속과 16세기 중반 사림(士林) 세력의 등장이 훨씬 더 중요한 단절의 시기라는 인식에 기본적인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를 단절이 아니라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2. 정치 세력과 주류 사상의 연속성

중국의 강남(江南) 농법 도입과 신유학(新儒學)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고려 후기 지방의 재지사족(在地士族)이 신진사대부가 되어 조선왕조 건국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이들이 조선왕조를 이끌어간 사림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보는 관점이 한국사학계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쳐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했던 고려 말기의 정치 주도층은 권문세족이라는 기득권적 수구 세력으로 간주되었으며, 조선왕조 개창을 주도했던 신진사대부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존재로 설정되었다. 그 바탕에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을 대신하여, 참신한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조선왕조 건설의 주체가 되었다는 이분법적 역사 인식이 깔려 있다.

신진사대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한 후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부류로 분화되었다. 보통 전자를 급진파 사대부, 후자를 온건파 사대부라 부른다. 오늘날 한국사학계에서는 온건파 사대부를 두고, 이미 기득권적인 지배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통한 전면적인 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조선왕조 개창 직전에 실시한 1391년의 토지 개혁에 온건파 사대부 대부분이 반대했던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치 세력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정도전(鄭道傳)은 조선 건국 6년 후인 1398년에, 정적이었던 조선의 3대 임금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 1367~1422년)에 의해 제거되었다. 또한, 태종의 재위 시기(1400~1418년)에는 권근(權近) 등 조선왕조의 건국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의 가치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16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정계를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사림 세력 역시 급진파 사대부가 아닌, 온건파 사대부의 계승자를 자처하였다.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가 조선왕조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이 역설은 기존의 학설로는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선왕조 건국을 주도했던 급진파 사대부가 건국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와 차별화되는 성리학 사상 체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 세력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왕조의 개창(급진파)과 왕조 개창 반대(온건파)라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지만, 두 그룹은 모두 주자성리학을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두 그룹의 정치 노선 차이는 그들의 이념적 차이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도 정치적 지향의 차이를 제외하면, 조선 건국을 주도한 급진파 사대부와 조선 건국을 반대한 온건파 사대부 사이에 사상적으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지향에 별다른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개창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가 조선 개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 운영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급진파 사대부이건 온건파 사대부이건 주자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신진사대부는 동일한 성격을 지녔다. 게다가 그들이 지녔던 성리학의 성격과 내용에서는 서로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들은 원에서 관학(官學)으로 장려하였던 주자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고려 내에서 발전시켰다. 원 복속기 고려와 원 사이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는 고려 관인층(官人層)이 원의 관학이었던 주자성리학을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조선왕조 개창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주자성리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극도로 비판했던, 이민족이 세운 왕조인 원의 관학에 그 기원을 두고 발전해나갔던 것이다.

한편, 불교가 주류 사상으로 위상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유교가 대신하였다는 관점은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성격 중 하나로서 상식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유불(儒佛) 교체의 결정적인 계기로 이해되던 조선왕조의 건국 이후에도 고려의 불교 전통이 오랫동안 강고하게 남아 있었다는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정치 이념과 시대 의식 등에 한정하면 조선 개창 전후의 불교계는 연속보다 단절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조선 전기, 적어도 15세기까지는 불교가 사회 내에서 여전히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상과 신앙을 두 축으로 하는 고려 불교의 전통은 조선 초기에도 중요하게 계승되었으며, 16~17세기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불교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불교 전통이 창출되었다.

또한, 조선 전기 승려(僧侶)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조선 건국 직후에도 승려의 사회적 신분은 절대로 낮지 않았다. 특히 조선 초기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에서는, 승려의 자격을 허락하는 증서인 도첩(度牒)의 발급 대상을 소수의 상층 양반(兩班) 자제로 제한하는 등 불교 승려를 상층 신분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 불교 승려의 신분적 지위가 낮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승려가 군역(軍役)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도 그들이 천민(賤民) 신분 속해서가 아니라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의 학생처럼 군역의 면제를 받았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불교 서적 간행의 측면에서도 조선 초기는 고려 후기와 연속되는 측면이 나타난다. 조선 개창 후에도 불교 서적은 활발히 간행되고 있었으며, 사찰뿐만 아니라 국가와 왕실이 불교 서적 간행의 주요 주체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왕실 불교의 성행, 불교계의 규모와 저변, 불교 서적의 간행과 간행 서적의 향유 계층 등의 측면에서, 조선 전기 불교계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조선 후기에는 불교계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이 크게 약해진다.

3. 통치 체제와 제도 운영의 연속성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와 관련하여 국가 통치와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 사회의 편제, 토지 개혁과 노비(奴婢) 정책, 국가의 재정(財政) 운용 등의 주제를 통해서 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지방 사회의 편제를 살펴보면, 고려의 주현(主縣)-속현(屬縣) 제도가 붕괴하고 지방 향리(鄕吏)의 영향력이 약화하는 현상은 기존의 통설처럼 조선왕조 개창으로 본격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원 복속기(1270~1356년)부터 보편화되었음이 지적되었다. 이는 지방 사회의 편제와 운영의 측면에서 원 복속기부터 16세기 중반 사림의 집권에 이르는 약 300년의 기간을 연속성의 관점에서 파악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원 복속기에 고려 특유의 주현-속현 제도가 붕괴하고 수령(守令) 중심의 지방 통치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본다. 또한, 수령 중심의 지방 통치 정책은 조선 개창 이후 더욱 공고해졌으나, 16세기 중반 사림의 집권 이후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鄕村) 자치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시각은 조선의 개창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 사건이 아니라, 원 복속기 이래 진행되던 변화와 개편을 공고히 하는 역사적 계기였다는 입장에 기반한 것이다.

한편, 조선 건국 세력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토지 개혁이나 노비 변정(辨正) 사업 등은 고려 후기부터 진행되었던 대토지 소유나 다수의 노비 소유 현상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심

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고려 말 조선 개창 세력에 의해 주도된 토지 개혁은 경작이 동반되지 않는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지배층의 대토지 소유나 노비 소유 확대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토지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졌으나 호적 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토지 소유자들은 호(戶)의 구성원으로 숨긴 노비 등 대규모의 사적(私的) 예속인(隸屬人)들을 동원하여 기존의 토지를 세습하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조선 건국 이후 노비 인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역사적 현상이 나타났다.

조선 초기에 시행된 노비 정책은 조선왕조 개창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고려 후기 이래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전민(田民) 변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조선 개창 이후 노비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한 관련 법제가 체계화되고 정교화되어, 노비 지배를 둘러싼 지배층 사이의 갈등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노비주(奴婢主)가 노비를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상속하는 데에 기본 토대가 되었던 노비 소유의 세습 원칙과 일천즉천(一賤則賤) 원리에 따른 노비의 신분 규정 원칙은 조선 초기에도 변함 없이 유지되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왕조의 개창은 고려 후기 이래의 노비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 제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조선왕조의 개창 이후에도 노비 인구의 증가세는 계속되었으며, 한국사 속에서 조선 전기는 노비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실시 때까지 국가의 재정 운용 수입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모두 공물(貢物)을 중심으로 조달되었음이 주목된다. 즉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기본적인 재정 구조는 공물을 통한 세입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 조선은 건국 직후인 태종 연간(1400~1418년)부터 공납제의 개편을 진행했지만, 공물을 중심으로 한 고려 후기 이래의 예산 조달 구조를 전면적으로 고치지 못했다. 조선 중기 대동법의 실시가 본격화된 이후에야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구조나 그에 기초한 정부의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고려 후기나 조선 전기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4. 대외 관계 추진과 보편문화 수용의 연속성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기에 이루어졌던 외교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근래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아울러 관복제(官服制)의 개편이나 역서(曆書)의 반사(頒賜) 등 중국으로부터의 보편문화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과 관인층이 조선이 명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天下)의 일부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졌던 데에는 고려의 원 복속 경험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되었다. 이전 고려의 지식인들과 관인층은 전통적으로 중국과는 다른 고려 고유의 천하관(天下觀)과 세계관을 지녔으나, 원 복속기에 이르면 원의 정치적 개입과 주자성리학의 논리에 큰 영향을 받아, 중국에 대하여 스스로를 이(夷)로 간주하는 화이(華夷) 의식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보편적 천하 인식, 즉 조선이 중국과는 구별되지만 중국 중심 세계 질서 속의 제후 국가라는 천하 인식은 원 복속기 고려 지식인들의 사유 체계와 천하 인식으로부터 기원하였다. 조선 시대의 지배엘리트층인 주자성리학자들의 보편적인 천하 인식과 그에 기초한 외교 의례는 원 복속기에 그 기원과 토대가 형성되었고 조선 개창 후에도 계승되었다. 다만 천하의 중심이 몽골족의 국가인 원에서 한족(漢族)의 국가인 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한, 명의 건국 직후부터 고려의 주자성리학자들은 원을 버리고 명을 사대(事大)의 대상으

로 삼아 명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였다. 조선 초기의 관인 지배층은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치적 주장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명 황제의 성지(聖旨)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명 황제 역시 성지를 직접 내리는 방식을 통하여 고려나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명 황제의 성지가 조선의 정치 세력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현상은 이전 원-고려 간 관계에서 원 황제의 성지가 고려의 권력 구조 최상위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한 것에서 기원하였다. 명은 고려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이 행사했던 방식을 철저히 본받았던 것이다.

한편, 조선의 영토 관념에 있어서도 원 복속기로부터의 계승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고려의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1374년)은 원래부터 고려의 영역이었으나 원에 빼앗겼던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군사 공격으로 수복하였다. 쌍성총관부의 수복은 고려가 원 복속의 상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고려는 쌍성총관부의 탈환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이북의 영역도 자기 영토로 개척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영토 개척 성과로 알려진 북방 6진(鎭)의 설치 역시 쌍성총관부 탈환에서부터 이어지는 북방 영토 개척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최종 결과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쌍성총관부 이북에 새로 개척된 영토는 원래 고려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영토 확장이 조선의 북방 6진 설치로 이어진 것은 원 복속기 해당 지역에 원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동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고려의 원 복속으로 인하여 고려의 북방 국경선이 사실상 국경선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국경선 안팎으로 사람들의 왕래와 이주가 활발해졌다. 고려의 국경선 밖으로도 많은 고려인이 이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려는 쌍성총관부 이북으로의 영토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고려와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 외교를 추진하였지만, 요동 지역의 주민과 영토를 두고 명과 끈질기게 경쟁을 벌였다. 1388년의 요동 정벌 시도 역시 그러한 경쟁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요동 지역에 거주하던 인호(人戶)의 소속 문제로 명과 신경전을 펼쳤다. 요동을 장악한 명은 조선의 국경 바깥에 거주하는 여진 부족의 거점에 군사 기구인 위(衛)를 설치하여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으나, 조선 역시 여진 부족을 복속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요동 지역을 둘러싼 고려와 명 사이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조선 초기 북방 6진의 개척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북방 6진 개척의 동인(動因)은 기본적으로 원 복속기 이래 활발했던 고려와 요동 지역 사이의 밀접한 인적 교류와 왕래에 있었다. 따라서 북방 6진의 개척을 통한 조선의 영토 확장은 조선 개창의 성과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

대체로 원 복속기 고려의 지배층은 원의 문물을 보편문화의 기준으로 상정하였다면, 조선의 지배층은 원을 계승한 명의 문물을 보편문화의 기준이라 간주하였다. 한편 명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서 원이 갖고 있던 국제적 지위를 계승하여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고려나 조선 역시 예전 원과의 관계를 근거로 삼아, 그러한 명의 의도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 그러한 정책의 실행에 주자성리학의 화夷論(華夷論)이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해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명에 대한 조선의 사대는 이후 청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즉 명과 청에 대한 조선의 자발적 사대 정책은 과거 원 복속기 고려가 원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에 그 기원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원 복속기 이전 고려의 관복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송(宋)이나 거란(契丹), 금(金) 등 어느 한 나라의 관복제에 치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제도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원 복속기에는 고려와 원 사이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원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원의 관복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원을 대신하여 명이 중원을 차지한 이후, 조선

의 집권층은 원과의 외교 관계를 청산하면서 고려 고유의 관복제로 회귀하지 않고, 원을 대신한 명의 관복제를 받아들였다. 명의 등장 이후 조선의 집권층이 명의 문물을 세계 보편의 문물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원 복속기 고려의 집권층이 원의 문물을 세계 보편의 문물로 상정했던 것을 계승한 결과이다.

한편, 명에서는 조선에 매년 자국의 역서(曆書)를 내려주어, 중국의 역서가 조선의 역법(曆法) 운용에 근간이 되도록 하였다. 일찍이 고려 전기에도 중국 왕조에서 고려에 역서를 내려주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주지도 않았고 고려 역시 절실히 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원 복속기부터는 원에서 정례적으로 고려에 역서를 내려주었으며, 고려에서도 해마다 원으로부터 역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원을 대신한 명도 원의 방식을 계승하여 조선에 매년 역서를 내려주었으며, 조선에서도 자국의 역서가 명의 역서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굳건해졌다. 중국왕조로부터 역서를 내려받는 관행은 원 복속기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원을 계승한 명과, 고려를 계승한 조선 사이의 관계에서도 정례화되었다.

5 맺음말

원을 대신한 명은 원이 남긴 유산과 영향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의 유산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복원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그것은 몽골(원) 유산의 청산작업이기도 했지만, 몽골(원)의 중국 지배 경험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진행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명과 비교하여 원이 중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몽골족이 세운 왕조라고 해서 원이 중국사에 끼친 영향이나 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지는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원은 13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가까이 고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기간동안 원이 남긴 유산의 무게와 비중은 상당히 컸다.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도 사실상 원 복속의 유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한국사학계에서는 고려의 원 복속이 한국사의 전개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의 건국, 지배 세력의 형성, 그리고 주자성리학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지배 이념 등은 원 복속의 유산에서, 혹은 원 복속의 청산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원 복속기부터 정비된 제도 중 상당수는 조선 건국 후에도 큰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명과의 외교 관계 설정, 정치적 결정의 권위 부여, 영토 인식의 변화와 북방 영토의 개척, 그리고 중화 보편의 문물 수용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사 이해의 중요한 단절점이자 분기점이라고 이해해 왔던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는 원 복속기의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복원하느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조선 건국의 성과물로 생각했던 많은 요소들을, 원 복속의 유산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복원하느냐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는 단절의 측면보다 연속의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가 많으며, 나아가 한국사 시기 구분의 결정적인 기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오히려 시기 구분의 기점을 찾는다면, 13세기 후반 원 복속이 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왕조의 개창 이전과 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 각 부문에서 뚜렷한 질적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 전기 관찬 사료들에서 보이는 조선왕조 개창 세력의 역사 인식과, 20세기 후반을 풍미했던 한국사학계의 발

전문적 역사 인식에서 한 발짝 벗어난다면, 조선왕조의 개창은 ‘과거와의 단절’ 혹은 ‘미래로의 발전’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원 복속기의 연속과 계승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될 수 있다.

21세기의 역사학은 과거 왕조 시대의 역사인식과 20세기의 발전론적 역사인식의 유산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를 주제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거칠게나마 표현하였다. 본 발표문의 논리와 내용 구성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 발표문의 문제 제기를 통해 왕조 교체를 중심으로 한국사의 변동과 발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왕조의 교체를 연속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 시각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그를 통해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풍부한 해석이 축적될 것이며,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의 시각과 문제 의식이 향후 더욱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金光哲, 『高麗後期 世族層研究』, 동아대학교출판부, 1991
- 김순자, 『한국 중세 한중관계사』, 혜안, 2007
-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도현철,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일조각, 1999
- 도현철, 『조선 전기 정치사상사』, 태학사, 2013
- 박종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12
-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토지분급제와 농민지배』, 일조각, 1986
- 이수건,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 정요근 외, 『고려에서 조선으로 - 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 역사비평사, 2019
- 정재훈, 『조선 전기 유교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 존 B. 던컨(김범 옮김), 『조선 왕조의 기원』, 너머북스, 2013
- 한영우, 『(개정판)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